



#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671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9년 2월 18일 (음력 1월 14일) 월요일

## 광주 초등학교 '미니학급' 시대 도래했다



지난해 3월 2일 광주 남구 봉선동 유안초등학교에서 신입생 입학식날에 1학년 어린이들이 교실에 들어서 첫 자리 배정 받는 모습.

신학기 광주지역 초등학교에 학급당 학생수가 10명대인 '미니학급'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과 도심 공동화 등의 여파로, 일부 학교에서는 학급당 학생수가 10명에도 미치지 못해 한 자릿수 초미니 학급이 운영될 전망이다.

반면 사립과 일부 인기 택지지구에서는 학급당 30명대 초·중반의 과밀화현상이 여전히 지역별·학교별 양극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 학급 가배정 결과, 흑룡(黑龍)마을출산분이 일었던 2012년 출생아들이 입학하는 해로 취학 대상 이동수는 지난해 1만

4754명이던 것이 1만5275명으로 521명 증가했으나, 학급수는 2년새 77개나 줄어 3919개로 추산됐다.

학생수가 신입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6학년생들이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전체 초등학생수가 줄어든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올해 광주지역 초등학생은 1~6학년 통틀어 8만9400여명으로 10년 전부터 3만3500명이나 감소했다.

전체 157개교 학급 가배정 결과,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22.84명으로 예상된 가운데 20명 미만, 심지어 10명 미만인 미니 학급들이 속출했다.

학급당 평균 학생수 20명 미만은 동구 D

‘6~7명 vs 31~34명’ 학급당 학생수 양극화  
10명대 38곳, 한 자릿수 5곳, 30명 초과 7곳  
저출산-공동화 여파, 사립-신도심은 과밀화  
작은학교 살리기·증축·통학구 조정 과제

초교, 서구 Y초교, 남구 B초교, 북구 G초교, 광산구 S초교 등 모두 38곳에 이른다. 비율로는 24.2%로, 광주지역 초등학교 4곳 중 한 곳 꼴이다.

동구 J초교, 광산 S초교, 도농복합지역인 남구 M초교 등 5곳은 상황이 더욱 심각해 학급당 학생수가 6~7명으로 10명에도 미치지 못해 초미니 학급 운영이 불가피할 실정이다.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1970년대에는 60명대, 1980년대에는 50명대 초반, 1990년대 초반에는 40명대 수준을 유지하다 1990년대 중반 30명대를 기록한 데 이어 꼬박 10년 전인 2009년, 처음으로 20명대로 진입했다.

이후로도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며 전남 도청과 광주시청 이전, 대규모 택지지구 조성 등의 여파로 도심공동화가 심화되면서 10명대 학급이 속출하고 있다. 20명대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간 학교만도 동구 S초교와 서구 H초교, 남구 B초교, 북구 D초교, 광산구 C초교 등 모두 21곳에 이른다.

반면 사립과 일부 택지지구에서는 학급당 학생수가 30명을 넘겨 과밀화 논란이 일고 있다.

사립 초교 3곳의 신학기 학급당 학생수는 나란히 33.67명, 31.50명, 30.11명으로, 모두 30명선을 넘어섰다.

광산 수완지구와 하남지구 내 4개 공립 초등학교도 학급당 30명 이상의 과밀화가 불가피할 실정이다. 특히, 수완지구 S초교는 학급당 34.67명으로, 광주지역 평균치보다 12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21.3명)보다 13명이나 많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학급당 학생수 양극화 해소와 일부 택지지구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수완지구 등 일부 택지지구 취학이동 수요 예측 실패 논란도 재발 방지 차원에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군과 학구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저출산과 공동화, 선호하는 거주지역과 학교 등에 따라 학급당 학생수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과 학교신설이나 교실 증축, 통학구역 조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 Photo 漫評

사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자유한국당 등 야권 일각에서 거론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에 대해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3·1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5대 중대범죄는 배제하되 6개 시위처벌자에 대해서는 사면 여부를 놓고 기초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회,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범죄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건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며 “이들은 배제됐다”고 덧붙였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의 원 등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을 사면할 건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는 아직 안 갔다.”고 말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 등 관련 인사들의 추세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기자 · 자료 사진 = 뉴스시



박상기

박근혜 사면 전혀 검토되지 않아...



김진태

전직 대통령 예우...



박상기

꿈도 꾸지 마라

## ‘안전보건 거버넌스 구축’ 결의대회 실시

광주 고용노동청 등 안전실천·안전풍토 조성키로

광주 고용노동청과 광주시 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는 15일 광주광역시 3층 대회의실에서 ‘안전보건 거버넌스 구축’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이번 결의대회는 지역사회에 안전실천 분위기를 조성하여 국정목표인 산재사망사고 절반줄이기의 실천력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김영미 광주고용노동청장, 정종제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사업장주 안전·보건관계자

및 재해예방기관·단체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1월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30여년 만에 전면 개정하여,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한 사업주 및 도급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원청의 안전보건관리 책임 임무가 확대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배달종사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한 바 있다.

이날 행사는 노·사·민·정 ‘안전보건



거버넌스 구축’ 실천결의문 채택에 이어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의 “안전은 노동자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적 권리”라는 내용의 특강이 있었다.

로저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풍토를 조성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 시하였다.

최남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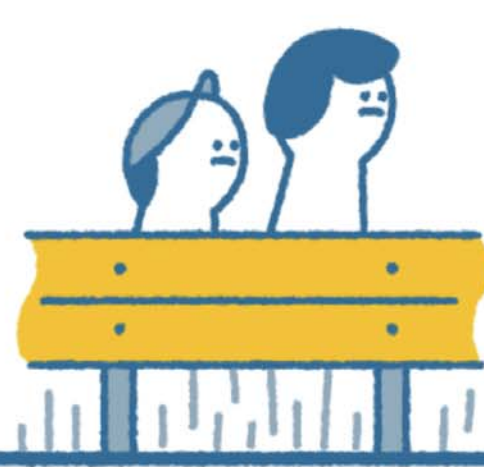
광주 고용노동청 김영미 청장은 “이번 결의대회는 재해 예방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사·민·정이 뜻을 함께한 의미 있는 자리로서, 노·사·민·정간 협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근

사람의 스마트 고속도로

###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이 나면



1 비상등 켜고 트렁크 열고



2 가드레일 밖 우선대피



3 사고신고 1588-2504

## 사람이 우선입니다

ex 한국도로공사